

# '조국 자 허위인턴 발급'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허위 확인서 입시에 활용  
조국 자녀 모두 입시비리로 판결... 조국·정경심 같은 혐의 재판 중  
검찰, '채널A 기사 사건' 당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최 불구속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가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민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이른바 '채널A 기사사건'으로 알려진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중권)은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인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당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5)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23

일 기소됐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한 바 있다.

법원의 조 씨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입시와 활용된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 대표는 27일 '채널A 기사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건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부장 변팔건)는 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

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 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채널A 기사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 대표는 지난해 4월31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사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찰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는 이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했음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와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 별건 2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협박성 취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의 재판은 27일에서 내달 17일로 미뤄지면 서 변수가 발생했다.

1심 선고 전에 이 전 기자가 내달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에 더해 재판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핵심 증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전 기자 측 주장인 우변호사는 26일 "피고인의 구속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가 재판 기일에 나오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인데 어차피 다음 재판 기일 전에 이 기자가 풀려나니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일정한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즉시 이 기자가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 비상시국연대, 서울시장 시민후보·제1야당후보 단일화 추진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문(反文)연대 투쟁기구인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가 27일 1차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시국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빌딩에서 가진 회의에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방안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이 선출한 범야권 시민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결선투표 형식으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사회를 맡은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권 폭정을 종식시킬 결정적인 계기"라며 "때문

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범야권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비상시국연대는 야권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만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의원 등이 모두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안 대표는 비상

시국연대의 범야권 단일후보 추대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며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의 성패는 국민의힘을 동참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로 인터뷰에서 "3차 구도에 대해 거의 상상해본 적 없다"며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유권자들은 몸이 다 달아 있다. 야권 지지

자들 마음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겠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확신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이다. 그는 같은 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안 대표에 대해 "너무나 시장 후보가 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다"며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국민의힘) 후보가 만들어져야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표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비상시국연대는 국민의힘 이외의 후보들을 모두 모아 단일화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신문광고도 내고 단일화 프로세스 과정을 내세우겠다"며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자연스레 단일화 될 것이다"고 했다.

김태훈 "문정권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야권후보 단일화해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동참 여부가 성패의 관건

김태훈 "문정권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야권후보 단일화해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동참 여부가 성패의 관건

김태훈 "문정권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야권후보 단일화해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동참 여부가 성패의 관건

김태훈 "문정권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야권후보 단일화해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동참 여부가 성패의 관건

김태훈 "문정권 종식시키려면 반드시 야권후보 단일화해야"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동참 여부가 성패의 관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빌딩에서 비상시국연대 대표자 연석회의에 열렸다. 사진은 이날 가장 중요한 안건인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단일화 방안에 대해 김태훈 공동대표(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민우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언급했다. 이헌 변호사는 "지난 총선 때 범야권 단일후보 논의가 실패로 돌아갔다"며 "이를 거울

삼아 서울-부산시장 선거 최종 후보는 범야권 단일후보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 부산시장 출사표 이연주 "가덕신공항 무산 시 사퇴"

김종인 가덕도行 앞두고 배수진 기자회견 "땀땀 인사 부정적 발언으로 부산민심 크게 악화... 지도부, 지지 밝혀야... 특별법 부결 시 후보 사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의 가덕신공항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조건부 출마라는 배수진을 쳤다.

이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며 "지도부가 부산시민에게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대국민 발표를 정식으로 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요구했다.

또 "지도부 반대로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최종 후보가 된다 해도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한다"며 "만약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히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2015년부터 가덕신공항을 찬성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이유로 "산업현장 전문가로서 정치적 유불

리를 떠나 활력 잃은 부산경제를 살리는 길은 신공항 건설을 통해 남북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며 "가덕신공항, 아니 부산국제공항은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다. 태평양도 사국가의 꿈이다"고 했다.

과거의 가덕신공항 무산 책임은 역대 정부로 돌렸다. 이 전 의원은 "정권마다 공약과 무산을 반복하며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가덕신공항에 집착하게 된 건 정치권 책임이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태도를 문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당선되고서도 4년간 본인 고향인 부산시민을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하다가 더불어민주당(당) 단재정이 성추행으로 물러난 시장 자리가 비자 당헌까지 바뀌게 후보를 내 공항에 불을 붙이는 뻔뻔함을 보여줬다"며 "부산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믿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오주환 기자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지도부의 땀땀 분들이 계속 (가덕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해서 서울은 어떻게 몰라도 부산은 그 발언 하나하나에 민심이 안 좋아지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어정정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명확하게 지지부를 짚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달 1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 부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건설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르면 2월 입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주환 기자

## 서울시장 박빙 판세에 與野 후보들 "강남 재건축" 외쳐

박영선 "재건축·재개발해야"... 당과 다른 입장이라 주목 나경원 "규제 풀어야... 민주당 후보가 할 수 있을지 의문" 안철수·오세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핵심공약 제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강남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란히 '강남 재건축' 불지피기에 나섰다.

28일 정치권에 의하면 나 전 의원은 27일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방문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거듭 약속하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강남 재건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나 전 의원은 "정말 이번에는 규제를 풀어드리겠다"며 "총고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높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장관이 강남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

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큰 정책 아래서 움직여야 하는 민주당 출신 시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전 의원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25일 주택공급대책 설명회에서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것이다"고 직격한 데 대해서도 "정말 답답한 일이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잡는다고 이 정부가 스물네 번 정책을 내놨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며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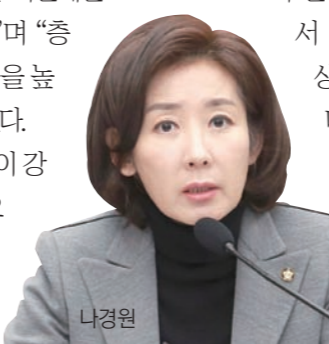
박 전 장관은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0년대식 아파트를 더 이상 지속시키는 힘들어 보인다"며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남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나 전 의원 외에도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이처럼 강남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강남이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를 결정 지을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3구(43만 명), 강남구(54만 명), 송파구(67만 명)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인구는 약 164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 수(967만 명)의 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부 자체가 박빙일 때는 17%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국계의 중론이다.

실제 진보 정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이들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을 때 선거에서 이겼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4년과 2018년 강남 3구에서 모두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로 이들 지역을 완전히 내줬을 때는 선거에서 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표 초반 앞서다가 강남 3구를 오 전 시장에게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다.

한태의 기자



나경원